

농가소득의 지주는 '쌀' 의미 폼하하면 위기 불 보듯



**'쌀' 농가소득의 46.9%, 쌀농사 그만두면 농사 그만둬야 할지도
식량보호정책 포기했던 영국의 우(愚) 타산지석 삼아 항구체제 갖춰야**

농업정책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 쌀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 단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혈을 토해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들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협상이 잘못되면 쌀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축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장차 농업포기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지도층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식량안보니 식량위기니 하는 말이 공허한 소리로만 들리는 모양이다.

정부가 쌀 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재협상에 관해 함구하고 있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는 알 수 없다. 이상적인 목표는 의무수입량을 확대하지 않고 관세화 유예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이번 재협상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요한 협상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점에서 관철이 쉽지 않을 듯하다. 한국은 두 나라와의 무역거래에서 큰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수입에 따른 농가피해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협상의 과제로 남는다. 이런 상황인데 관가와 재계에 포진한 비교우위론자들이 농산물은 수입해서 먹는 게 싸다, 관세화 개방이 더 유리하다는 따위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머지않아 쌀농사를 포기해야 할 만큼 쌀을 많이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비교우위론자들의 감산정책, 오판의 극치

현재 소비수요의 4%인 의무수입량은 140만섬에 해당한다. 그것이 2배로 늘어난다고만 가정하더라도 280만섬이나 된다. 만약 이 물량이 국내 쌀값의 20%선에 해마다 수입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쌀 농사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아무리 관세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내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값싼 수입쌀에 밀려 국내산이 설자리를 잃을 게 뻔하다.

쌀은 농가소득의 46.9%를 차지한다. 수입쌀에 눌러 쌀값이 떨어지면 다른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생계를 꾸미기 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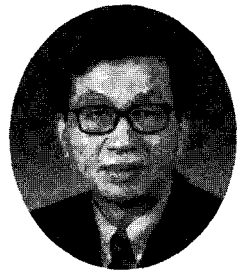
다. 결국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에 밀려 이 나라에서 밀이 사라졌다. 시민단체들이 우리 밀 먹기 운동을 활

발하게 벌여 왔지만 자급률은 0.1%에 불과하다. 콩이나 옥수수도 실정은 비슷하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중단립종 자포니카는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다. 생산국들이 먹고 남아야 수출한다. 그 때문에 막상 세계적인 흉년이라도 들면 돈을 아무리 주더라도 사오기 어렵다. 지난 1980년대 흉년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총칼로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는 민심이 흉흉해지자 다급했다. 외화가 없어 해외에서 고리채를 빌려 석유를 힘겹게 사오는데 쌀까지 사와야 할 판이었으니 말이다.

쌀은 일반상품과 달리 흉년이 들면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신군부는 수출국에 구걸하다시피 사정해서 값을 몇 배나 더 지불하고 사와야만 했다. 그것도 국제시장에 쌀이 모자라 닥닥 끌어모으듯이 사들여야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을 다 사오고도 모자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이고 멀리 스페인에서도 사와야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군부는 수요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도입해야만 했다. 수출국이 장기도입계약을 주장했기



김영호
시사평론가



때문이다. 그 결과 재고미가 1981년부터 10년이 넘도록 1000만섬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다 1988, 1989년 잇달아 풍년이 들면서 재고미가 1400만섬으로 늘어났다. 그러자 당시 노태우 정권이 정부수매를 감축하기 위해 쌀이 남아돈다고 홍보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믿었다. 수입쌀이 이월되어 재고미가 적정수준을 넘어섰는데도 마치 과잉생산으로 남아도는 줄 잘못 알았던 것이다. 그러자 역대 정권의 비교우 위론자들이 앞장서 감산정책을 밀어붙였다. 그것도 모자라 시장개방에 맞춰 농지축소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제2의 농지개혁이라고 할 만큼 대대적인 농지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골자로 하고 있어 장차 농업포기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경쟁력 약화, 시장개방의 당면 결과

농업환경이 크게 바뀌었지만 헌법 121조 1항이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유효하다. 하지만 농지법 개정안은 사실상 비농업인에게 농지소유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그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농업영위이나 실질적으로는 임대소득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위반이다. 농지법을 개정하려면 먼저 헌법부터 개정하는 것이 옳다.

정부가 마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지전용 허가권을 대폭 확대했다. 허가면적을 3만㎡ 미만으로 3배나 늘리고 첨부서류도 대폭 생

략했다. 이런 규제완화는 농지투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사회는 혈연·학연으로 얽힌 연고사회이고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정책을 편다. 지방행정의 부패구조도 심각하다. 상수원 주변에 난립한 오염배출업소들이 그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위해 비농업진흥지역의 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지조성비도 면제하도록 했다. 이것 또한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농공단지, 지방공단, 국가공단 등 각종 산업공단이 텅텅 비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인들이 토지투자 이득이 적다고 공단입주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공단에 입주하면 나중에 그 땅을 공장으로 팔아야 하니까 땅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현재처럼 전용규제가 엄격한데도 연평균 1.3ha의 농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이용에 관한 체계적인 기본계획도 없이 농지전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결과는 너무 자명하다. 소규모 단위로 농지가 무질서하게 전용되어 나머지 농지도 흐름이 끊겨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 곳곳에 공장들이 들어서 갖가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인근 농지도 폐농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내 쌀값이 수입산에 비해 5배 가량 비싸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농지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영농규모를 확대한다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농지축소는 오히려 영농규모의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농지축소가 지닌 심각성은 수입확대를 촉진하여

사실상 농업포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원인은 농지가 협
소하기 때문이다. 인구는 많은데 국토는 좁
다보니 땅값이 비싸 생산원가가 높은 것이
다. 그런데 쌀 시장이 개방된다는 이유로 농
지를 줄이면 쌀값이 더 올라 경쟁력을 더 잃
는다.

식량위기 오래전 가시와, 식량안보 꼭 지켜야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은 19세기 중엽 식
량보호정책을 포기했다. 값싼 농산물을 수
입하는 대신에 공산물 수출에 주력했던 것
이다. 그 영국이 2차 대전을 치르는 동안 대
륙봉쇄령에 의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어야
했다. 그 역사적 교훈이 그 때 40%수준에
머물던 식량자급률을 125%로 끌어올렸다.
영국 말고도 유럽 선진공업국의 식량자급률
은 프랑스 222%, 스웨덴 103%, 이탈리아
80% 등으로 높다. 전쟁을 겪으면서 식량안
보의 중요성을 깨달아 항구적인 대비체제를
구축했다는 뜻이다.

값싼 수입농산물에 밀려 식량자급률이
26.9%로 떨어졌다. 쌀을 거의 100% 가깝
게 자급하니까 이 정도나마 유지하는 것이
다. 쌀을 빼면 식량자급률은 5%에 불과하
다. 주 수입원인 쌀농사를 짓지 못하면 농민
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농사를 그만
두는 도리 밖에 없다. 농업을 포기하면 농촌
이 붕괴되고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영향은 막중할 것이다. 대부분의 농민
은 자본-기술-지식-정보에서 열위에 놓여있
다. 무엇보다도 고령자가 많다. 360만 농민
은 생계가 막혀 결국 도시빈민으로 전락하



고 만다.

그런데도 식량안보를 걱정하지 않는다.
돈만 있으면 식량은 얼마든지 외국에서 사
먹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진 듯하다. 지금은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중국도 산업화·도시
화에 따라 농지가 급속하게 줄고 있다. 또
사막화에 따른 농지잠식도 빠른 속도로 진
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농민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 식량자급이 위협받는 실정
이다. 이미 중국은 식량 순수입국으로 전락했
다.

농업을 포기하면 민족의 생존을 식량메이
저에게 맡기는 사태가 일어난다. 이제 믿을
것은 현명한 국민 밖에 없다. 식량은 수입해
서 먹는 게 싸다는 비교우위론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합심해
서 우리 농산물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은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식량정책이기
도 하다. 식량기근으로 인해 8억의 인류가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 기상이변이 식량위
기를 예고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방안보
못지 않게 중요하다. **농약정보**